



편집인 칼럼

안전성 확인된 우리 농산물

■ 최운홍 /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아주머니, 이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맞아요?”

“아. 요즘 친환경농산물 아닌게 어디있어. 다 친환경농산물이지”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라벨을 붙이지 않고 왜 풋말만 세워 놨어요?”

“응, 레떼루(라벨)를 사다 붙여야 하는데 아직 못샀어...”

시장입구에서 각종 농산물을 팔고 있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와 장보러 나온 젊은 아주머니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된지도 10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다단계로 되어있는 이 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소비자들만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 무농약, 저농약)과 생산에서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라는 2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떤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형마트와 시장 등에서 수거한 사과, 배, 감, 귤 등 과일 4,766건을 검사한 결과 99.8%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은 귤 6건, 복숭아 2건, 사과 1건 등 9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물이나 과일 세척제로 씻으면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말에 김장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내 전역에서 배추, 무, 파, 마늘, 건고추 등 농산물과 소금, 젓갈 등 40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세균, 중금속, 색소 등을 검사했는데 0.4%인 2건만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증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 농산물은 인체에 안전한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신문보도에 보니 광주·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12곳에서 한해 동안 인증한 건수가 무려 3,915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증기관 1곳에서 한해 326건을 인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증기관 능력이 어느정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부실 인증이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 친환경농산물은 지난해 10월 현재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10%정도이고 생산량 기준으로는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품목별 비중은 곡류가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실류 30%, 채소류 14%, 특작류 2%, 기타 6% 등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민간기관 인증은 60%에 달합니다.

혹시라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가 중간상인들에 의해 가격을 높게 받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브랜드 홍보효과만을 생각한 무분별한 인증이라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생산한 농산물은 모두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농산물의 개념을 재정립 하고 국민 모두가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마음껏 애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면 어떨까요? Y

